



주간통일정세 2012-17(2012.04.16~04.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1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노동당, 김일성 100회 생일 경축 연회(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5일 평양의 목란관에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경축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함.
 - 연회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중앙기관, 군 간부들과 근로자, 재외동포와 외국손님 등이 초대됐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음.
- **우동측 北보위부 1부부장 행방묘연... '경질설'(4/17, 연합뉴스)**
 - 한 대북소식통은 17일 "김정은이 그동안 우동측을 장성택 전제 카드로, 후계구축을 위한 '사냥개'로 활용해왔다"며 "하지만 김정은은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그동안 북한 간부들의 원성의 대상이던 우동측을 숙청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그동안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무소불위의 보위부를 통솔하며 김 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해왔으나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지난달 하순부터 갑자기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춤.
 - 김 위원장 사망 100일째인 지난달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김 1위원장 수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우동측의 이름은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으며 우동측의 이름이 놓이던 그 자리엔 김원홍 당시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의 이름이 대신 들어감.
- **북한 金씨 일가 '기념사진 정치'도 3대 세습(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일제히 보도함.
 -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1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군무자(군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지난 10일에는 새로 건설된 인민극장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 설계일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북한단신> 김정은, 열병식 참가자와 기념촬영(4/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



양통신이 20일 전했다.

- 김 1위원장의 기념촬영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박도춘 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주규창, 오일정 당 부장과 군 장성들인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조정철, 운동현, 심상대, 박정천 등이 참석했음.

● 北, 김정은 첫 '노작' 대대적 선전(4/22, 노동신문)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담화를 '노작(勞作)'으로 규정한 북한이 이에 대한 각계 고위간부의 각오와 반응을 전하며 대대적인 '노작 선전'을 벌이고 있음.
- 리경식 농업상은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노작을 받아 안은 우리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알곡증산으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맹세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 19일 노동신문에 공개된 김 1위원장의 담화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충성맹세인 셈임.
- 김 1위원장은 제4차 당대표자회(11일)를 앞둔 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을 상대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란 제목으로 담화했음.
- 담화에는 외교 및 대남정책을 제외한 정치, 경제, 국토관리, 문화, 교육 사업 등 전 부문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음.
- 북한은 이 담화를 김 1위원장의 첫 '노작'으로 규정했으며,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20일 노동신문에 올린 글에서 이 담화를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이라고 표현했음.



■ 김정은 동향

- 4/17 김정은 제1위원장, 黨 제4차 대표자회 참가자들 및 김일성 주석 생일경축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4.17,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박도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리을설·황순희·김철만(항일의 老투사들)
 - 인민극장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 설계일꾼들과 기념사진(4.17,중통·중·평방)
 - 최룡해, 장성택, 현철해, 김원홍 참가
 - 금수산태양궁전 군무자들과 기념사진(4.17,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현철해, 김원홍 참가
- 4/17 김정은 제1위원장(4.15), 김영남(4.16), 시리아 대통령에게 독립 66돌 관련 축전(4.17,중통·평방)
- 4/19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만수대창작사 일꾼-창작가-종업원들과 기념 촬영(4.19,중·평방·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리재일(黨 제1부부장)· 권혁봉(黨 부부장) 동행
 -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4.12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군인건설자' 등 여러 단위들의 편지에 친필 답전(4.19,중통·중방)
- 4/19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연설(김일성 생일 100돌 열병식)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면서 지식경제형 경제강국 건설에 천만군민을 불러주시는 힘찬 진군가"라고 선전(4.19,평방/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 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 강성국가)
 - "우리(北)의 일심단결은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대를 이어 계속 강화발전 되고 있다"며 '김정은 두리에 일심단결 강화' 강조(4.19,평방/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
- 4/20 김정은 黨제1비서, 김일성주석 생일 100돌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4.20,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박도춘, 현철해, 주규창, 오일정,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김영철, 조경철, 윤동현, 심상대, 박정천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인민극장', 4.17 은하수관현악단의 개관공연(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진행(4.17,중통)
- 김정일 위원장 저작('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발표 14돌 즈음 '민족대단결5대방침 관철, 남북간 연대·연합 강화를 위한 조국통일운동' 등 선동(4.18,우리민족끼리/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가치)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경축행사 등 동향
 - 평성·신의주·해주·청진·원산·개성시와 장자강·성천강변 일대 및 함경남도·자강도 등 각 도·시, 4.15 축포야외 진행(4.16, 중방)
 - 국제축전 참가자들과의 친선연환모임, 4.16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4.16,중통)
 - 北 외무성, 4.16 박의춘(외무상) 등 참가下 駐北 외교·국제기구대표들을 위한 연회 개최(4.17,중통·중방)
 - 인민군 열병식 및 평양과 각 지방에서 축포야회·예술공연과 집단체조 진행 등 "김일성 생일 100돌을 성대히 경축했다"고 자축(4.16,중통)
 - 駐北 무관단, 4.16 제14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4.16,중통·중방)
 - 주체사상 세계대회 참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 김일성·김정숙에게 선물과 김정일에게 '러시아잠수함대 100돌 훈장' 전달(4.16,중통)
- 평양시, 4.20 對南 규탄 군민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4.20,중통·중·평방·조중TV)
 -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문경덕, 곽범기, 로두철,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 참가
-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 경축 공연(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20,중통)
 - 黨,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등 관람
- 태권도성지 중심(청춘거리), 4.20 준공식 진행(4.20,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리영수(黨 부장), 박명철(체육상), 장웅(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장) 등 참가
- 대남규탄 평안남도·함경남도 군민대회, 4.21 진행(4.21,중통)
- 對南규탄 평안북도·강원도 군민대회, 4.22 개최(4.22,중통·중방)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연설(4.15)을 "세계 1만2,000여개 각종 출판보도물들이 특대소식으로 전하고 5대륙의 수억 명이 시청했다"고 선전(4.22,중통·중방)



나. 경제

- **北, 개성~신의주 외자고속도로 신설 추진(4/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중국 등의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개성~신의주 고속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이 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계획하는 신규 고속도로는 총 길이 387.1km에 왕복 6차로로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잇는 현대식 고속도로로 건설되며 이와 별도로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향산을 잇는 총 길이 80km 이상의 왕복 4차로 지선도로 건설도 추진됨.
 - 이들 도로 구간에는 휴게소 12곳, 톨게이트 19곳, 인터체인지 18곳, 교차로 1곳이 예정돼 있으며 총 건설비가 65억 달러이며, 미국의 설계용역 회사가 고속도로의 설계를 맡은 것으로 돼 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황해남도서 최근 4개월 2만 명 아사 정보(4/21, 도쿄신문)**
 -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최악의 기근이 발생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최근까지 2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
 - 이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김정은 제1비서가 보고를 받고 군용으로 비축해둔 쌀을 풀어 배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 신문에 의하면 특히 기아가 심각한 지역은 서해 쪽의 백천, 연안, 청단 등 3개 군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올 들어 천명 이상이 굶어 죽는 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다. 군사

- **'광명성3호'는 北 우주개발 5개년계획 첫 단계(4/16,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13일 강행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2012년부터 시작된 북한 '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된 운반로켓보다 더 큰 대형로켓과 정지위성 개발에도 곧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조선의 우주계획은 계속 추진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북한)은 2012년부터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우주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며 "광명성 3호'의 발사는 5개년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었다"고 밝힘.
 - 신문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5년간 지구관측위성의 다음 과제인 정지위성의 개발에 착수한다"며 "또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보다 더 큰 대형운반로켓의 개발이 시작된다"고 전함.
- **北 신형미사일 발사대 차량, 중국산 가능성(4/17, 교도통신)**
 -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 대 차량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 통신에 의하면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중국이 수출한 특수차량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제로 확인되면 북한에 무기와 관련 물자의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중국에 비판이 몰릴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차량은 한쪽의 바퀴가 8개로 디자인과 구조가 중국의 군수관련 대기업인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이 개발한 특수차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짐.
- **北 "종합적 우주개발계획 있어"(4/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9일 "우리에게는 우주개발기구들을 최첨단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미국이 몇 푼어치의 식량 지원 보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우주개발권리를 빼앗으려 획책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또 13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의 실패와 관련,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광명성 3호'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해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끝낸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라. 사회·문화

- **北노동신문 "태양절에 백두산서 첫 봄우뢰"(4/17, 노동신문)**
-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태양절)인 지난 15일 백두산에서 올해 들어 첫 봄우뢰(우레의 북한어)가 울렸다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함.
 - 신문은 '백두산에서 첫 봄우뢰가 울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15일 새벽 5시37분 백두산에서 장쾌한 해돋이가 시작됐고 오전 10시 백두산 상공에서 첫 봄우뢰가 장엄하게 울렸다"며 "군단포의 포성과도 같이 연방 터지는 요란한 우뢰 소리는 천지를 들었다 놓았다"고 전함.
 - 백두산에서 봄우뢰는 보통 4월18일께 나타나는데 여느해보다 며칠 앞당겨 4월15일에 울린 것은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 **北인민극장 개관...은하수악단 개관공연(종합)(4/17,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 4월15일)을 기념해 평양에 건설한 인민극장을 17일 개관, 개관공연으로 은하수 관현악단이 '잊지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를 무대에 올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만수대지구에 자리잡은 인민극장은 연건축면적 5만여㎡, 총건평 1만1천 500여㎡로, 지하 2층, 지상 6층에 1천500석의 원형생음극장과 500석의 지하극장을 갖췄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건설됐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지난 10일 현장을 찾아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
 - 이날 공연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리용무,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당비서 등 고위인사들이 관람했으며 장성택, 리영호, 최룡해, 박도춘, 김영춘, 김정각, 리용무 등은 지난 15일 열병식 때처럼 흰색 군복(예복)차림이었음.
- **북한 공식 홈페이지는 15달러짜리(?) (4/19, 美 폭스뉴스 인터넷판)**
 - 美 남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웹디자이너 로버트 웨스트모어는 북한 정권의 새 홈페이지를 자신이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전함.
 - 美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정말 몰랐으며, 솔직히 난 북한에 웹사이트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음.
 - 악명높은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은 실패한 로켓 발사에는 수억 달러를 쓰면서 다른 분야, 특히 웹 디자인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통신은 전함.
- **美프로농구단 6월 첫 방북 추진(4/2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출신 프로선수들로 구성된 농구단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한국 프로농구팀에서 선수생활을 한 루크 엘리씨는 미 프로농구선수들이 6월 방북해 평양에서 시범경기를 하는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RFA에 밝혔음.
 - 엘리씨는 방북에 나설 미 선수단이 주로 아시아에서 활동한 선수들로 구성되며, 감독은 30여 개국에서 선수들을 지도한 선교농구단 감독 출신인 그레그 헤이즈씨라고 소개
 - 그러나 선수단 구성과 북한 측의 초청까지 순조롭게 추진되던 미 농구단의 방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RFA는 전했다.
- **北, 평양 청춘거리에 '태권도성지' 준공(4/21, 노동신문)**
 - 북한의 평양시 청춘거리에 '태권도성지중심'이 완공돼 20일 준공식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
 - 조선식 합각지붕에 연건축면적인 1만수천㎡인 태권도성지중심은 태권도역사관, 지식보급실, 훈련관, 국제회의실, 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췄다고 신문은 소개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명철



체육상, 장용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2. 대외정세

가. 일반

- **안보리 北로켓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종합)(4/1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말함.
 -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美 "독자 대북제재 강화...대화계획 없다"(4/1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관련, 독자적인 대북(對北)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인 제재와 (북·미간) 양자적인 제재를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도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함.
 -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북·미 추가 대화 전망에 대해 "이번 발사로 북한은 고립심화라는 구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면서 "추가적인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없고, 현재 계획된 것은 확실히 없다"고 강조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의지가 있으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들이 기존의 행태를 이어가는 한 추가 대화의 문은 계속 닫힐 것이고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클린턴 "北지도부, 기존정책 재평가해야"(종합)(4/17,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며 핵보유국이 되려 하기 전에 자국민을 부양하고 교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브라질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고 "북한의 젊은 새 지도부는 이제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자신들 정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안보리 의장성명 전면배격"(4/17, 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유린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외무성은 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올릴 것"이라고 다짐함.
 - 외무성은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약속을 뒤집어엮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며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핵실험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

- **美 "2·29 합의 어긴 것은 北"(4/17, 연합뉴스)**
 -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2·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측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특히 "오늘 성명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 했으며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보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북한은 아주 불투명한 체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우리는 그들의 공식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과거에 나쁜 행동의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알고 있



다"고 덧붙임.

● **중국,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4/18, 요미우리신문)**

-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탈북자의 송환을 중단했다고 전했으며 라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보도함.

● **北, 4.15행사 中 前외교부장 참석 제안 거부(4/18, 아사히신문)**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반발해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행사 때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의 참석 제안을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지난 4월 15일의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행사 때 중국은 리 전 외교부장의 참석을 타진했으나 북한이 거부함.
- 소식통은 한·미·일이 북한의 위성이 실체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며 북한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중국 정부가 현직 각료나 당 간부가 아닌 리 전부장의 파견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유엔기구, 대북 제재 외중에 北에 컴퓨터 제공(4/18, 연합뉴스)**

- 유엔산하기구인 유엔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수개월전 미 휴렛팩커드(HP)사 제품인 컴퓨터와 서버를 은밀하게 북한에 제공했다고 미 폭스뉴스가 인터넷판을 통해 17일 보도함.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는 중국의 무역업체를 통해 북한에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으며 대금 5만2천638달러를 송금하려 했으나 3월초 유엔의 중국내 거래 은행인뱅크오프아메리카가 미 재무부 규정위반을 내세워 거부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함.
- HP는 WIPO가 북한에 제공한 컴퓨터와 서버 등이 자사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성명을 통해 "거래처와 재판매업자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 **美, 안보리에 北 17개 기관 자산 동결 요구(4/18, 연합뉴스)**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17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무역 회사와 금융기관 등 17개 기관단체를 안보리 제재위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함.
- 이는 현재 자산이 동결된 8개 기관단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에 제시한 추가 제재 리스트에 17개 기관단체를 명기했으며,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곳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송일호 "납치문제로 일본과 4차례 회담"(4/18, 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교섭담당 대사가 납치 문제와 관련, 일본과 과거 4차례 회담했다고 밝혔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일본 언론에 의하면 송 대사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복수의 매체에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중의원 예산위원장(전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관련 4차례 회담했다고 말함.
- 송 대사는 "일본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만났다"면서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당의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말함.

● **美 국방부 "北, 우주항공기술 진전 없다"(4/18,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이번 실패는 북한이 우주항공 프로그램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인 패트릭 오라일리 중장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시험 발사는 다시 한 번 (미사일) 비행 초기에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北 김정은, '영향력 큰 100인'에 선정(4/18, 연합뉴스)**

-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100인에 선정된 주요 인물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美 대선 공화당 유력 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세계적 투자가 워런 버핏, 영국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과 그의 여동생 피파 미들턴,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등임.
- 타임은 "영감을 주거나,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에게 도전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밝힘.

● **패네타, 北 이동미사일 공개에 우려(종합)(4/19,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이동 미사일 장비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패네타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으며 "북한이 만일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이동발사 능력을 갖췄다면 그로 인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함.



- **美 "中,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할 것"(4/1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 중국 정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 중국이 이런 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다"라고 강조함.

- **패네타 美국방 "中, 北미사일 개발 지원"(4/19,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고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전함.
 - 패네타 장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기술 교환"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물음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밝힘.
 - 그는 "그러나 분명히 지원은 있었다"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핵 무기능력은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과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 **北, 日에 일본인 유골 반환 제안(4/20,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에 2차 세계대전 전후 남겨진 일본인의 유골 반환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함.
 - 이 통신에 의하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일본 방북단에 이런 의향을 밝혔는데 송 대사는 북한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다면 서 일본 측으로부터 수집과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함.

- **北 합의파기 美 망신주려는 책략(美 전한국과장)(4/20, 교도통신)**
 - 북한이 미국과 지난 2월 타결한 합의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파기한 것은 미국의 체면을 잃게 하려는 계산된 술책이라고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20일 밝혔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일 중인 스트로브 전 과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일시 중단 등의 대가로 식량 지원을 받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 게 미국을 망신시키기 위한 책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 스트로브 전 과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며 합의를 맺은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北 신형 이동미사일은 실물아닌 가짜<美전문가>(4/21, 일본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 15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신형 이동미사일은 실물이 아니라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는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이동미사일이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 라이트는 평양의 열병행사에 초청받은 각국 취재진이 촬영한 미사일 6기의 선명한 사진을 비교한 결과 동체 표면에 늘어진 전선용 관(duct)의 설치 장소와 미사일을 고정하는 벨트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등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음.

● **'대화파' 美진보논객 "北 더는 못 믿어"(4/22, 연합뉴스)**

-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을 '협상'이라고 주장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논객이 북한과 더이상의 대화는 어렵다는 강경론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21일(현지시간) 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이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최근 격월간 국제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새 길을 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음.
- 시걸 국장은 북한의 이른바 '2·29 합의' 파기에 대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고, 더욱 위험해 보인다"면서 "더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가 없고, 핵·미사일 개발을 자제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음.

● **北노동당-中공산당 베이징서 전략대화(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대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
- 김영일과 왕자루이의 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이후 이뤄진 양측간 최고위급 회담임.
- 통신은 "쌍방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왕자루이는 이날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음.
- 중국 신화통신도 21일 북중 '전략회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양측은 공산당과 노동당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그리고 다른 국제 및 지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4.22), '현 남북관계 정세가 긴박하게 된 것은 남측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민족내부 문제에 개입하려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위협 발언(4.22, 중통)
- 北 노동당(김영일 등 黨대표단) - 中공산당(왕자루이 王家瑞 대외 연락부장), 4.21 베이징에서 '전략대화' 진행(4.22, 중통 · 중방)
- 중국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 베이징 다오위따이(釣漁臺)에서 북 노동당 대표단을 위한 환영 만찬 개최(4.22, 중방)
- 일본 수상 망언('일본군 성적노예문제'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면부정, 피해자들과 인류양심에 대한 우롱'이라고 개탄 및 '과거범죄 청산' 촉구(4.22, 중통 · 민주조선/만 사람을 경악케 하는 망발)

나. 6자회담(북핵)

● IAEA, 北방문 가능성 낮아(4/17, 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측이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과 관련된 미국과의 합의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한 만큼 핵시설 사찰을 위한 북한 방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 연합뉴스가 전함.
- IAEA의 길 튜더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표를 감안할 때 IAEA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 北 핵실험 등 임시중지 해제는 당연(4/19, 조선신보)

- 2·29 북미합의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중지조치는 당연히 해제된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함.
- 신문은 "조선외무성 성명은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수 있게 됐다'고 했다"며 "대응조치가 무엇인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조선은 모든 일을 자주권, 생존권 수호의 견지에서 정당당당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조선의 행동을 도발로 몰아붙이고 여론을 오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정권이라면 허세를 부리기 전에 조선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산생되는 후과부터 고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함.

● 북한, 3차 핵실험 실시 준비 완료(4/20, 일본 후지TV 온라인 뉴스 FNN)

- 북한은 핵실험용 지하시설의 굴착공사 등을 끝내고 다시 핵실험을 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후지TV 온라인 뉴스 FNN이 20



일 보도

- FNN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외형적인 준비가 갖춰졌으며,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음.
- 북한은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FNN은 지적했음.

3. 대남정세

- **北 "서울 날려보내는 특별행동조치 할 수도"(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복수를 천명하면서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18일 조선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태양절 100돌을 성대히 경축한 바로 이러한 때 이명박역도와 그 패당만은 동족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극단의 도발광기를 부리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함.
 - 성명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속 반동과 깡패 대학생 무리들을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곳곳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망나니짓을 벌여놓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명박 역적패당"이라며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형상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총질까지 해대는 난동을 부리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최고존엄 모독 사죄 안하면 복수성전"(4/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9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정부·정당·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괴뢰역적패당은 태양절 행사를 중상모독한 중대범죄에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천만군민은 활화산 같은 분노를 총폭발시켜 복수의 성전에 펼쳐나설 것이며 이땅에서 괴뢰역적패당을 영영 쓸어버릴 것"이라고 밝힘.
- **北, 이대통령에 막말·욕설 동원 원색비난(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일 원색적인 막말과 욕설까지 동원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내놓은 '인간의 탈을 벗은 희세의 야만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6일 라디오연설 내용에 대해 "우리



체제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쥐 XX'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음.

- 이 대통령은 16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에 통신은 "이명박 쥐XX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잡아내 말려 죽이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 일념"이라고 밝혔음.

● 北 평양서 대남 규탄 대규모 군중집회(종합)(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평양시 군민 대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회는 리일환 평양시 당비서의 사회로 오금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해 송일익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규탄 연설을 했음.
- 이날 행사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총참모장,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김양건 당비서, 조병주, 로두철 내각부총리, 전용남 청년동맹 1비서 등이 참석

● 李대통령 "北 개방 앞서 농지개혁해야"(종합)(4/21,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농지개혁 단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대통령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농지 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그것(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李대통령 "통미봉남은 옛말..이젠 '통중봉북'"(4/21, 연합뉴스)

-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지나간 과거사다.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通中封北)이 맞다고 본다."고 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특별강연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를 이같이 제시했음.
- 이 대통령은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한미간에 합작이다. 미국도 이렇게 이야기 했다"면서 "20년, 30년 전에 쓰던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현재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 대통령은 "중국은 남과 통하고 북을 봉쇄하는 게 아니냐"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며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양국 관계가 점차 긴밀해 지는 점을 언급한 것임.



-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혈맹으로 북한을 옹호했던 중국도 결국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됨.

■ 기타 (대남)

- 李大통령의 '北, 4.15 행사비용' 및 '핵과 미사일위협' 발언 등을 거론 "극악한 중대도발"이라며 '동쪽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의 발로'라고 비난(4.20, 중통·노동신문·평방/참을 수 없는 모독, 극악한 중대도발)
-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4.21) 이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및 미사일 발사장면 공개를 비난하며 '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그 기회에 아예 남쪽땅을 완전히 타고 앓을 것'이라고 위협(4.21, 중통)
- 통일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4.18, 北 장거리 로켓 발사 및 열병식 등 언급 및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에 대해 "동쪽대결근성의 필연적발로"라고 비난(4.22, 중통·노동신문·평방/본색을 드러낸 대결미치광이)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핵실험보다 추가미사일 가능성 높아"(4/19)

- 북한은 조만간 핵실험보다는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18일(현지시각) 제기됐음.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등에서 근무했던 군사·정보 전문가 프레데릭 플라이츠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청문회 직후 연합뉴스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단시일 내에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언젠가 핵실험을 하겠지만, 과거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곧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분명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면서 "서해에 남북 해군의 대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 플라이츠는 특히 최근 한국 정보 당국이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음. 그는 "현장에 토사의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가 파악한 정확한 정보는 이는 늘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지난 5년간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북한은 늘 거기에서 발굴작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반드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은 미국 등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데다 보유한 핵분열 물질의 양도 제한적"이라면서 곧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런 분석은 최근 한국 정부 소식통이 美 상업위성인 '퀵버드' 촬영 사진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핵실험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됨.
-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지난 2006년, 2009년 핵실험 당시를 언급하며 "역사적인 패턴으로 미뤄 북한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린 연구원은 또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아버지 김정일의 '게임 플랜(game plan)'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대화나 도발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음.
-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와 함께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의원들과 증인들의 성토와 지적이 이어졌음. 하워드 버먼 민주당



의원은 "중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외교위원장도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北 핵실험 등 임시중지 해제는 당연"〈조선신보〉(4/19)

- 2·29 북미합의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중지조치는 당연히 해제된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매체로 분류됨.
- 신문은 "조선외무성 성명은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수 있게 됐다'고 했다"며 "대응조치가 무엇인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조선은 모든 일을 자주권, 생존권 수호의 견지에서 정정당당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조선의 행동을 도발로 몰아붙이고 여론을 오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정권이라면 허세를 부리기 전에 조선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산생되는 후과부터 고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북조선의 추기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했을 뿐 대화의 모색방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강경론을 접고 나선다면 대화에 의한 사태수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북한, 3차 핵실험 실시 준비 완료"〈日TV〉(4/20)

- 북한은 핵실험용 지하시설의 굴착공사 등을 끝내고 다시 핵실험을 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후지TV 온라인 뉴스 FNN이 20일 보도했다. FNN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외형적인 준비가 갖춰졌다.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 북한은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FNN은 지적했다.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이은 것임.
- 앞서 8일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2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던 풍계리에서 기존의 핵실험 갱도 2개 외에 새 갱도를 뚫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한 바 있음. 미국 상업위성 '퀵버드'가 1일 찍은 사진에 따르면 풍계리에선 지난 두 차례 핵실험에 사용된 동쪽과 서쪽 갱도 말고도 남쪽에 새 갱도가 굴착되고 있었음.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성대국의 하나인 '군사강국'을 이뤘다는 점을 내세우고 이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해 내부권력 장악과 주민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 그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핵실험을 실시하는 수순을 밟았음.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3개월 뒤인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1개월 뒤인 5월 제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했음.

나. 미·북 관계

● "北, 美 식량지원 중단 반발 핵사찰 거부 표명"(4/16)

-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에 반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북미 합의사항인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미국의 식량 지원과 IAEA 감시하의 북한 우라늄 농축 중단,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2월의 북미 합의가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음.
- 북한은 미국이 지난 13일 식량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IAEA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매체는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미 합의를 준수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을 구실로 '미국 쪽에서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음.
- 신문은 "북미 합의의 파기로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미사일 발사 비난 의장 성명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먼저 북미 합의를 깬다고 강조하고 있음.

● 클린턴 "北지도부, 기존정책 재평가해야"(종합)(4/1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며 핵보유국이 되려 하기 전에 자국민을 부양하고 교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브라질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고 "북한의 젊은 새 지도부는 이제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자신들 정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불과 몇시간만에 나온 것임.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심보다는 자국민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음.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새로운 도발행위를 감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데 중국과 여타 국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려던 미국과의 잠재적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덧붙였음.

● 미국방 "北 추가도발 저지 위해 총력"(4/17)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음. 패네타 장관은 이날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핵실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강조한 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도 감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그는 다만 북한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소문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실패한 도발 행위를 감시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면서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추가 도발에 완벽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패네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에 언급, "국제사회가 중단을 촉구했으나 그들은 강행했고 실패했다"면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는 명백한 도발이고 그들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었다"고 비난했음.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美 "독자 대북제재 강화...대화계획 없다"(4/17)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관련, 독자적인 대북(對北)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인 제재와 (북·미간) 양자적인 제재를 포함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기존에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도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북·미 추가 대화 전망에 대해 "이번 발사로 북한은 고립심화라는 구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면서 "추가적인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없고, 현재 계획된 것은 확실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의지가 있으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들이 기존의 행태를 이어가는 한 추가 대화의 문은 계속 닫힐 것이고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밖에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언급, "현재 시점에서 이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한은 이런 종류의 행동에서 사이클과 패턴을 보여 왔다"면서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음.

● 라클리어 "北핵실험시 모든 대응방안 강구"(종합)(4/17)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17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동맹국과 함께 모든 범주의 대응방안(all options)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핵실험 기지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할수도 있다고 밝혔음.
-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오후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가진 국방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정밀타격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후의 군사 작전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1994년 때처럼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핵시설에 대해 정밀타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는 또 지난 15일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신형 미사일에 대해 "이 미사일이 진짜로 활용될 수 있는 미사일인지 모조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 자리에서 선불리 예측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조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행 추이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음.
-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과거 북의 도발 양상을 보면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해 왔다"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을 감시할 것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충분한 예측으로 안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특히 "북한의 새지도층이 국제 규범과 규정을 준수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라면서 "하지만 만약 북한의 지도층이 추가 도발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한미 동맹의 강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라클리어 사령관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서울 방문이 처음인 라클리어 사령관은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다면 향후 한미동맹 발전, 기타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상 미국 전력이 한국의 안보와 평화 동맹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美 "2·29 합의 어긴 것은 北"(4/18)

-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른바 '2·29 합의' 파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것에 대해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음.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북한



- 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측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 외무성이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더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임.
 - 그는 특히 "오늘 성명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음.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보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북한은 아주 불투명한 체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공식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과거에 나쁜 행동의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 대북제재와 관련, "기준에 제재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이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임성남 외교통상부 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에 대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토머스 쾀트리먼 차관보 등 국무부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패네타 "북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4/19)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은 밤에 자신을 깨어 있도록 만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다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그는 "미국은 세계의 그러한 지역에서 거의 매일 전쟁을 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말하고 행동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음.
- 패네타 장관은 이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네타 장관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실패한 뒤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그러한 행동은 도발로 간주될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음.
-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의 관계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에서 달라질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5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준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클린턴 장관과 함께 나토 본부를 방문했음.

● "클린턴·부시·오바마, 모두 北에 당해"(4/19)

-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공화·플로리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모두 북한에 배반당했다"고 말했다. 레티넨 위원장은 이날 외교위 주최로 열린 북



한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라는 영화와 같이 끊임없는 반복"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이 영화는 매일 같은 일을 겪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 그라운드호그 데이는 우리의 '경칩과 비슷한 기념일로, 봄을 알리는 동물인 북미산 마멋(그라운드호그)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임.

- 레티넨 위원장은 "협상과 파기, 도발이 이어지고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다시 양보하면서 구애에 나서고 이는 협상타결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결국 또다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라는 배반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낸 제네바합의는 고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으로 이어졌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지만 비밀 원자로 건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른바 '윤일(Leap Day Deal, 閏日) 합의'를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 청문회에 당국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도 거부했다"고 비판했음. 실제로 이날 청문회에는 마이클 그린 국제평가기략센터(IASC) 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CFR) 연구원, 패트릭 트로닌 신안보연구센터(CNAS) 연구원 등 민간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만 증인으로 출석했음.
- 이어 레티넨 위원장은 "김정일은 언론인 납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했고,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난 15일 대규모 열병식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은 향후 대북정책의 험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 그는 이밖에 "북한의 정치는 김씨 왕조를 위한 것이지 미국의 우려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美 "인도-북한 미사일 발사 비교해선 안돼"(4/20)

- 인도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교해선 안 된다고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니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인도가 한 일과 북한이 한 일은 다르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카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모든 핵 강국들이 남아시아 지역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인도는 하루 전 사정거리 5천km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달 13일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으나 발사 후 약 1분 뒤 로켓이 공중 분해돼서 해상에 파편으로 떨어지면서 실패했음.



● 美국민 76% "北, 심각한 안보위협"(4/20)

-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약 8명은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CNN방송이 지난 13~15일 성인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가 북한을 '매우 심각한(very serious)' 위협이라고 평가했음. 또 '다소 심각한(moderately serious)' 위협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3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음. 이어 '가벼운(slight)' 위협이라는 응답과 위협이 아니라는 응답은 각각 15%와 8%에 그쳤고, 나머지(1%)는 무응답자였음.
- 이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직후에 실시된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임. 당시 조사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협'과 '다소 심각한 위협'이라는 응답이 각각 전체의 52%와 28%였음.
-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미국 안보에 최대 위협 국가인 것으로 지목됐음. 전체 응답자의 48%가 이란을 매우 심각한 위협, 33%는 다소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음.
- 또 시리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으나 다소 심각한 위협이라는 평가는 40%에 달했음.
- 이밖에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주적'으로,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심각한 위협국가로 평가했던 러시아는 이번 조사에서 11%만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패네타, 北 이동미사일 공개에 우려(종합)(4/20)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이동 미사일 장비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패네타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한이 만일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이동발사 능력을 갖췄다면 그로 인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어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 이동 미사일 공개의 파장을 알아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 또 패네타 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선 "북한이 밤에 자신을 깨어 있게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다"고 밝혔음. 패네타 장관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그는 이어 "미국은 세계의 그러한 지역에서 거의 매일 전쟁을 할 뻔한 상황에 부닥쳐 있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패네타 장관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실패한 뒤 과거처럼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그러한 행동은 도발로 간주할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美프로농구단 6월 첫 방북 추진" <RFA>(4/21)

- 미국 출신 프로선수들로 구성된 농구단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음.
- 한국 프로농구팀에서 선수생활을 한 루크 엘리씨는 미 프로농구선수들이 6월 방북해 평양에서 시범경기를 하는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RFA에 밝혔음. 엘리씨는 방북에 나설 미 선수단이 주로 아시아에서 활동한 선수들로 구성되며, 감독은 30여 개국에서 선수들을 지도한 선교농구단 감독 출신인 그레그 헤이즈씨라고 소개했음.
- 미 농구단은 6월18일 북한에 도착해 5일간 머물며 북한의 대학이나 직업농구 선수단과 경기할 계획임.
- 그러나 선수단 구성과 북한 측의 초청까지 순조롭게 추진되던 미 농구단의 방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RFA는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北 신형미사일 발사대 차량, 중국산 가능성"(4/17)

-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중국이 수출한 특수차량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제로 확인되면 북한에 무기와 관련 물자의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중국에 비판이 몰릴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차량은 한쪽의 바퀴가 8개로 디자인과 구조가 중국의 군수관련 대기업인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이 개발한 특수차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제기된 신형 미사일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보다 커, 이에 맞는 대형 발사대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군수관련 기업이 북한과 협력하려면 중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北, 4.15행사 中 前외교부장 참석 제안 거부"(4/18)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반발해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행사 때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의 참석 제안을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지난 4월 15일의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행사 때 중국은 리 전 외교부장의 참석을 타진했으나 북한이 거부했음.
- 이는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이 일찍부터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자제를 요구한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일 가능성이 있음.

- 소식통은 한·미·일이 북한의 위성이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며 북한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중국 정부가 현직 각료나 당 간부가 아닌 리 전부장의 파견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따라서 북한도 리 전 부장의 자격과 위성발사 자제 요구에 대한 반발로 리 전 외교부장의 방문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일을 '민족 최대의 경축일'로 규정하고 이례적으로 대규모 열병식을 했으며, 수많은 외국 인사를 초청했음.

● 北노동당-中공산당 베이징서 전략대화(4/22)

-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대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음.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했음. 김영일과 왕자루이의 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이후 이뤄진 양측간 최고위급 회담임.
- 통신은 "쌍방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왕자루이는 이날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음.
- 중국 신화통신도 21일 북중 '전략회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양측은 공산당과 노동당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그리고 다른 국제 및 지역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 김영일을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방중을 위해 20일 평양을 떠났음.

라. 일·북 관계

● 日참의원 "北 미사일 발사는 폭거" 결의안 채택(4/16)

- 일본 참의원(상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라고 비난했음. 일본 참의원은 16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폭거로, 도발적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참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비핵화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음.
- 중의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北, 日에 일본인 유골 반환 제안(4/20)

- 북한이 일본에 2차 세계대전 전후 남겨진 일본인의 유골 반환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일본 방북단에 이런 의향을 밝혔음.
- 송 대사는 북한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다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수집과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했음. 2차 세계대전 전후 북한에 남았다 숨진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작년 11월 북한 측과 극비 접촉해 수집과 반환을 요청한 바 있음.
- 교도통신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골 반환 문제를 꺼낸 것은 일본 측을 흔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송 대사는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일본 방북단을 평양시내 호텔에서 만난 자리에서 "평양시내에서 진행되는 도로와 주택 개발 현장에서 많은 유골이 발견됐다"면서 "그중에서 일본인으로 확인된 유골은 보관되고 있다"고 말했음.
- 송 대사는 일본 민주당 중의원 의원인 나카이 히로시(中井裕) 전 납치문제담당상 겸 공안위원장과 과거 4차례 만나 납치자 문제와 북송 일본인 처 일시 귀국 문제 등을 논의했었음.

● 北, 일본인처 방문 對日 개선 카드활용 움직임(4/20)

- 북한이 1959~1984년 북송된 일본인처의 일본 방문을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됨.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월 한국인 남편과 함께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인처 미나카와 미쓰코(皆川光子 73)의 수기를 보도해 일본의 관심을 끌었음. 특히 당시는 북한과 일본이 양측 간 국교 정상화를 가로막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한 갈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시기였음.
- 지난 2008년 8월 이래 북한과 일본 사이에 당국자 간 대화가 중단됐음에도 나카이 히로시(中井裕) 전 납치문제 담당상과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작년 7월과 올해 1월 중국에서 비밀접촉을 가졌음. 3월에는 몽골에서 송 대사가 나카이 전 담당상을 대리하는 일본 학자를 만나 일본인처의 모국 방문을 비롯한 현안에 관해 협의했음.
- 일련의 만남에서 송 대사는 일본인처 방문에 대해 일본 측과 교섭할 용의를 표시한 것으로 북-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1월 비밀접촉에서 나카이 전 담당상과 송 대사가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한 또다른 시도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북한에 그대로 있는 일본인의 유골을 송환하는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음.
- 미나카와는 평양에서 19일 교도통신과 가진 회견을 통해 1997년처럼 다시 일본 귀향프로그램 방식으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음. 북한에서 52년 동안 거주하면서 북한 국적까지 취득한 미나카와는 나이가 들어 오사카와 요코하마에 있는 오빠와 누이



를 죽기 전에 상봉하고 싶어하면서 일본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음.

- 미나카와는 "양측 관계가 나쁘다 해도 비정부 단체가 (일본 귀향)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나카와는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가 1997~2000년 사이에 주선해 자신을 포함해 43명의 일본인치가 일본을 방문해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음.
- 납치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북한과 일본 간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일본인치가 북한 내에서 일본 언론과 회견한 것은 극히 이례적임.
- 미나카와는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원산에 애초 40명 이상의 일본인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9명 정도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마. 러·북 관계

● <북한단신>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에 친서(4/17)

-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친서에 "북·러 관계가 앞으로도 호상 존중과 선린에 기초해 두 나라의 복리와 지역적 안정과 안전에 부합되게 발전하리라고 믿는다"고 썼음.
-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경축하는 공연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가 16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당·정·군의 간부들이 참석했음.
-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경축하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16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3일 정령을 통해 만수대창작사, 조선혁명박물관, 수풍발전소 1발전직장 등 모범적인 단위에 '3중영예의붉은기' 칭호를 수여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음. 신문은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평군 수두중학교에 '3중영예의붉은기'를, 고성군 영웅해금강중학교와 은파군 서중중학교에 '2중영예의붉은기' 칭호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 ▲김일성 주석의 생모 강반석의 120회 생일(4월21일)을 맞아 기념우표가 발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바. 기 타

● 안보리 北로켓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종합)(4/1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만임.
-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말했다.
 -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기존 결의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entity)와 품목(item)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안보리는 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 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안보리는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안보리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北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4/1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strongly condemn)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총 9개 항으로 구성돼 있음.
- 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 결의의 위반이며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deplores)하고 종전의 결의에 의해 수정된(제재)조치를 조정(adjust)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 단체(entities) 및 품목(items)을 추가 지정했으며 북한의 추가(로켓) 발사 또는 핵실험(nuclear test)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안보리는 강조했다.
- 다음은 의장성명의 전문임.
- (1항)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4월12일(뉴욕시간) 발사(launch)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 한다.
- (2항) 안보리는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는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underscore).



- (3항) 안보리는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하였음을 개탄(deplores)한다.
 - (4항)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suspend)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reestablish)할 것을 요구(demand)한다.
 - (5항)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항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결의 1874호에 의해 수정된 바 있는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하는데 합의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북한제재위원회)가 아래 조치를 취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한다.
 - (제재대상) 단체(entities) 및 품목(items) 추가 지정.
 - 개인, 단체 및 품목(S/2009/205 및 INPCIRPart3)에 관한 위원회의 (제재대상) 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update)하고 이후 매년 갱신.
 - 북한제재위원회의 연례 작업계획을 갱신.
 - (6항) 안보리는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상기 문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보리가 이후 추가 5일 이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 (7항) 안보리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abandon)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cease)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도발(provocation)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 및 1874 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immediately comply fully)할 것을 북한에 요구(demand)한다.
 - (8항)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 (9항)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launch) 또는 핵실험(nuclear test)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
- <연합시론> 안보리 제재 강화는 北 도발에 경고(4/1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음. 이것은 북한 새 체제의 도발에 대한 경고임.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계속 민생보다는 군사력을 챙기고 과시하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을 답습해왔음.
 - 북한은 급기야 지난 13일 자신들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음. 긴급 소집된 안보리는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의장성명은 "산하기구인 북한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 등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음.



-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불과 사흘 만임. 안보리의 신속한 조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 때문에 가능했음.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 또는 비난함으로써 얻는 손익을 면밀히 계산해서 행동했을 것으로 봄. 중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무조건 감싸고 돌 입장이 아닌 것임.
- 안보리 의장성명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하찮게 취급하며 도발을 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두차례나 국제사회에 도발행위를 저지른 데 이어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 제1비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 북한은 국제사회에 군사력을 과시하며 도발하면 오랜 목표인 '강성대국'을 이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 강성대국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님.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판에 거액을 들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 아닐 수 없음. 북한이 도발행위를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조치를 추가할 것이고, 북한의 경제사정은 악화될 것임.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며 도발적인 행동 대신 자국민을 부양하고 교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음. 북한은 이런 충고를 새겨들어야 함.
- 북한은 하루속히 태도를 바꿔야 함.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같은 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 것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새 출발을 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새 출발을 하면 도와주겠다는 얘기임.
-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16일 북한의 김 제1비서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생을 챙긴다면 중국 이상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봄.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반면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으로 계속 국제사회에 도발한다면 추가 제재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김정은 체제는 결국 위기를 맞을 것임.

● <안보리, 이례적 속도전..긴박했던 사흘>(4/1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 16일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음.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에 따르면 이는 안보리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걸린 최단기 기록임.



-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은 지난 사흘 동안 외교 채널을 총 동원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음. 한미 양국은 이 기간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이끌어냈음.
-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조치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나와야 북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 이에 따라 지난 달 16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공포 이후 미국, 중국 등과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음. 지난달 25일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들이 양자회담을 통해 단호한 대처에 합의했고 다음날인 26일에는 한·중 정상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 철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한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13일 미국 국무장관에게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전면에서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으며 14일에는 중국 외교장관과 협의에서 협조를 당부했음. 한미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서도 안보리 논의 결과물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한 공동 입장을 수립했음. 한미 간의 이런 공조를 바탕으로 13일 저녁부터 14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진행했음.
- 미국과 중국이 24시간 이상을 교섭하면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14일 오후 늦게 전격 합의에 이르자 미국의 라이스 대사는 전화로 합의 사실을 우리 측에 알려왔으며 추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음. 미국은 이후 다른 3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에 이를 통보했으며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에도 의장성명 안을 회람시켰음.
-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이의제기 기간(silence procedure)'을 거쳐 의장성명 안에 이견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오전 10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이의제기 기간은 특정 사안을 결정할 때 일정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과 관련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종전과 달리 대북 안보리 의장성명을 빨리 채택하는 데 동의한 배경에는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됨. 중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한 이후 북한의 새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했음.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실망을 했으며 북한을 견제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의미임.
- 중국은 이번에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 의장성명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북한의 로켓 추가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대신 6자 회담 재개와 북미 합의 준수 등이 중요하다는 항목을 의장성명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이런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자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음. 유엔 안팎에서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을 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유엔의 조치가 추가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이 계산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전에 강력한 예방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임.

- 북한이 이번에도 로켓 발사 이후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더는 북한을 감쌀 명분이 없어짐. 특히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진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수 있음.
- 하지만 중국이 빠른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의했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유엔본부 외교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 <3년전보다 강해진 메시지.. 핵심은 '트리거 조항'(4/1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이번 의장성명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비해 여러 모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음. 3년 전의 '규탄'(condemn)이 이번엔 '강력 규탄(strongly condemn)'으로, '위반'(contravention)은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각각 바뀌었음. 이번 발사가 역내에서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고 이를 '개탄'(deplore)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된 내용임. '심각한 위반'은 2009년에는 중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한 표현이었음.
- 이번 의장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트리거(trigger, 방아쇠) 조항'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결의 위반이고 ▲이를 규탄하며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조치를 표명하는 등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미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추가 도발 억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일단은 시도해 보기로 했음.
- 우리 정부는 과거의 패턴을 볼때 북한이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억제하려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단합된 경의의 메시지를 던지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음. 중국은 미국과의 논의에서 처음에는 트리거 조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최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핵실험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결국 미국의 설득에 응했다고 함.
- 안보리는 트리거 조항을 통해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음. 김숙 유엔대사는 "이 조항은 지난 14일의 시리아 결의안에도 없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말했음.
- 당초 의장성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2009년의 성명보다는 낮은 수위를 요구했던 중국은 트리거 조항을 포함해 형식이 아닌 내용에



서는 거의 100% 양보했음. 6자회담 재개와 북미 비핵화 합의의 이행 등을 넣으려던 중국의 노력도 무산됐음. 미국은 현 상황에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주장을 폈고, 중국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임.

- 2009년에는 제재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개인'까지 추가 지정하고 이를 연례적으로 갱신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힘. 신규 제재는 아니더라도 기존 제재를 더욱 확대, 보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임.
- 이밖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와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기존 결의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문서화한 내용도 우리측 요구가 수용된 결과임. 여기서 말하는 추가 도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대남 군사도발도 포함함.
- 이번 조치는 결의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내용은 추가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제재 확대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결의보다 낮은 수위로 볼 수 없다는게 유엔 인콰의 평가임. 표결을 거치는 결의와 비교해 의장성명은 15개 이사국의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는 결의보다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임.
-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우리측의 핵심적인 주장이 모두 반영된 강한 내용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고 "특히 우리측 요구가 실제 문안으로 바뀌면서 더욱 강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유엔기구, 대북 제재 와중에 北에 컴퓨터 제공"(4/18)

- 유엔산하기구인 유엔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수개월전 미 휴렛팩커드(HP)사 제품인 컴퓨터와 서버를 은밀하게 북한에 제공했다고 미 폭스뉴스가 인터넷판을 통해 17일 보도했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는 중국의 무역업체를 통해 북한에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으며 대금 5만2천638달러를 송금하려 했으나 3월초 유엔의 중국내 거래 은행인 뱅크오프아메리카가 미 재무부 규정위반을 내세워 거부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 HP는 WIPO가 북한에 제공한 컴퓨터와 서버 등이 자사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성명을 통해 "거래처와 재판매업자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음. HP의 공급계약은 수입업체로 하여금 미국의 수출관련법을 준수하고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에 호응해 HP제품 수출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HP의 대북 수출금지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의 공급자에게 적용됨.
-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2명의 전문가는 WIPO가 북한에 컴퓨터와 서버를 제공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차원에서 볼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음. 그러나 WIPO는 컴퓨터와 서버 제공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는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IPO는 북한에 제공한 컴퓨터의 대금 결제가 미국법에 의해 무산됐음을 시인하면서도 국제기구인 WIPO는 이 사안에 대해 미국 국내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른 통로의 송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노트르담대학의 조지 로페즈 정치학교수는 WIPO가 안보리 대북한 제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북한에 컴퓨터와 서버를 보낸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안보리 제재위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그는 컴퓨터 역시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된다 고 말했다.
- WIPO의 대북 컴퓨터 제공 사실은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제네바에서 미국측 대표를 포함한 관련 외교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후 외부로 알려졌음. WIPO가 은밀하게 북한에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제공한 사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와 북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IAEA, 北방문 가능성 낮아"(4/18)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측이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한 만큼 핵시설 사찰을 위한 북한 방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IAEA의 길 튜더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표를 감안할 때 IAEA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북한 외무성은 앞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역사가 없다'는 약속을 뒤집어엮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며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北 "안보리 의장성명 전면배격"(4/18)

- 북한은 17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유린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 외무성은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역사가 없다'는 약속을 뒤집어엮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며 "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핵실험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음.

-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만인 16일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美의원 "中, 北 ICBM개발 지원 의혹"(4/19)

-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18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크 터너(오하이오) 하원의원은 1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음.
- 터너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대형미사일을 언급한 뒤 "그 미사일이 중국 기술에 의해 개발됐다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
- 특히 그는 이와 관련, 미사일기술 전문가인 리처드 피셔의 분석을 이같은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음. 피셔는 당시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 탑재차량에 대해 "16개의 바퀴가 달린 이동발사차량(TEL)은 중국의 설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이것이 북한에서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음.
- 터너 의원은 "이것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 장관과 클래퍼 국장에게 중국 정부나 기업이 북한의 ICBM용 이동발사차량 획득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제재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北로켓으로 대북정책 '게임체인지'"(4/17)

-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을 계기로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 핵, 미사일 등 북한이 설정한 게임에 반응하는 식이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내부 문제를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미국에서 최근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한국도 북한 민생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이른바 '게임체인지(Game Change)'라고 규정했음. '게임체인지'는 지난 2008년 미 대선 과정을 그린 정치칼럼니스트 존 하일먼의 저서 제목으로,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국면전환책을 통해 난국을 타개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이 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최근 미국에서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관련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것 등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또 "최근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다룬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amp 14)'과 '고아원 원장의 아들(The Orphan Master's Son)'이라는 책이 많이 읽히고 있다"고 전했음.
 - 이어 이 소식통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언급, "첫번째 파고가 넘어간 것"이라면서 "다들 2번째 파고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밝혀 제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그러면서 의장성명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가능하다면 많은 국제적 상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싶어하는데 미국 등이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그는 또 "미국 내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음. 그는 특히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관련, "잇단 도발로 인해 협상과 대화는 이제 어려워졌다"며 "식량지원이 포함된 '2·29 합의'는 폐기된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밖에 이 소식통은 대북정책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은 중국이 말하는 것보다는 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개최(4/17)

- 지식경제부는 17일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급성장한 양국 경제교류 성과와 의의를 점검하고 앞으로 경제 전망과 새로운 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을 중국 상무부와 공동 개최했음.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 쩡페이엔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 중국 시장경제학의 대부 우징렌 박사,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정중욱 전



주중 대사, 오영호 코트라 사장 등 한·중 경제전문가와 기업인 등 550여명이 참석했음.

- 이 행사에서는 ▲지난 20년간 한중 경제협력 회고와 비전 ▲향후 20년 양국 경제관계 신좌표 모색 ▲미래형 한중 산업협력 모델과 방안 등 3개 분과별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음. 홍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가 현재의 세계 최대시장을 지향했다면 한중 FTA는 미래의 최대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중 FTA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코트라는 이 행사와 연계해 중화권 대형 유통망 초청 상담회(중국 유통바이어 50개사 참가),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중국 투자가 60여명 참가) 등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대한 투자 유치 확대를 지원했음.

다. 한·일 관계

● 日총리,李大통령에 친서(종합2보)(4/20)

- 청와대는 2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음.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친서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평가와 성공적 개최에 대한 얘기, 최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공조 등 양국 간 협력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한 사이토 쓰요시(齋藤経功) 관방 부장관으로부터 노다 총리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면서 "정상 간 친서는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도 없다"고 밝혔음.
- 다른 핵심 관계자도 "친서에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부인했음.
-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이날 사이토 관방 부장관이 노다 총리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친서를 지참하고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사이토 부장관은 친서의 목적에 대해, 5월 중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라. 미·중 관계

● "미·중, 北로켓발사 '강력비난' 의장성명안 합의"(4/16)

-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안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소식통이 15일 밝혔음. 이들 소식통은 그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의 대응 방안을 협의해온 상임이사국 미국과 중국이 전날 이 같은 대북 의장성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교도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의장성명안은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가 탄



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면서 제재 확대를 촉구하는 등 엄중히 경고하고 있음.

- 외교 소식통들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체가 16일 의장성명안을 논의해 이르면 그날 중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랜 맹방인 중국이 대북 의장성명 작성에 관여한 점에서 채택되면 북한에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지적했음.

● "美-中, 두 차례 사이버 워게임 실시" <가디언>(4/16)

-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공격에서 군사 충돌로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에 두 차례 사이버 워 게임을 했으며 5월 중에 또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16일 단독으로 보도했음.
- 사이버 워게임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주관하고 양국 관리들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취했음. 워게임은 6월과 12월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각각 열렸음. 미국 측에서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정보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그리고 중국 측에서 국방 및 외교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이버 워게임은 '트랙 1.5' 외교로 통하고 있음.
- CSIS의 짐 루이스 소장은 첫 워게임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다는 가정 아래에서 대처 방법을 서로 제시했는데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열린 워게임에서는 상대방이 사이버 공격을 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대립 여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함.
- 루이스 소장은 "중국측 인사들은 제국주의를 겪었고 한 세기 동안 굴욕을 당했다는 태도였음. 그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파워관계가 중국 측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과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중국 정부가 개입돼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음.

● 美 "中,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할 것"(4/20)

-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 중국 정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 중국이 이런 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그는 "유엔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제재위원회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앞서 공화당 마이크 터너(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 토니 부대변인은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보도가 사실이기를 바란다"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난민 협약이라는 국제의무를 지킬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 美 "中에 北미사일 지원 의혹 공식제기"(종합)(4/21)

-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 중국을 상대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문제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계속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그는 또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위성' 추가 발사 계획에 대해 "이는 아주 나쁜 생각으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도발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 이에 앞서 공화당 마이크 터너(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기술 교환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AP통신은 한국 정부도 중국에 대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 탑재차량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냐"는 질의를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 미·일 관계

● 日 미국령 테니안섬에 자위대 주둔 추진(4/18)

- 일본이 오키나와(沖縄) 주변 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령인 북마리아나의 테니안섬에 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사이판 근처 테니안섬의 미군 기지 일부를 빌려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부대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주둔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미군과의 본격적인 군사 훈



련을 통해 오키나와와 센카쿠 등 동중국해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임.

- 일본은 초기 단계에서 소규모 병력을 배치한 뒤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대를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위대의 상주 거점으로 키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 테니안섬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의 중핵 기지로 꿈에 가까운데다 미국과의 공동 군사훈련이 쉽기 때문임.
- 자위대가 미군과의 훈련을 확대하려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해 난세이제도의 방위력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자위대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 테니안섬에 거점을 확보할 경우 미국령 주둔은 처음이 됨.

● "美 해병 이전 日 부담, 늘리지 않기로"(4/19)

-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 해병대의 이전에 따른 일본 측의 부담이 늘지 않게 됐다. 19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에 따른 일본 측의 부담 상한액을 2006년에 합의했던 28억 달러로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음.
-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 규모가 2006년 주일 미군 재편 계획 합의 당시 8천 명에서 약 4천 명으로 줄어 일본은 비용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음. 미국 측은 오히려 일본에 부담액을 41억 달러로 증액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일본 측이 거부했음.
- 미국은 기존 합의액인 28억 달러를 유지하되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31억 달러로 금액을 명기하자고 제안해 현재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요구에 전향적이지만, 방위성은 일본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임.
-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미 해병대의 전체 규모를 2006년 합의 당시의 약 8천 명에서 9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음.

● 美 오키나와 주둔 해병 8천600명 이전(4/20)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8천600명을 괄 등 일본 밖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19일 열린 주일 미군 재편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심의관급 협의에서 이렇게 합의했음.
- 양국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8천600명을 이전하고, 1만 900명은 잔류토록 했음. 일본 밖으로 옮기는 8천600명 가운데 4천 명은 괄으로, 2천600명은 하와이로, 1천200명은 호주로, 800명은 미국 본토 등으로 이전하기로 했음.
- 지난 2006년 합의한 주일 미군 재편 계획에서는 8천 명을 괄으로 이전하기로 했었음.
- 양국은 해병대의 괄 이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이전 비용 총액을



2006년 합의 당시 102억 7천만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음. 일본 측의 재정 부담은 애초 합의했던 28억 달러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31억 2천만 달러로 하기로 했음. 여기에는 일본이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의 테니안 기지에 미국과의 공동 훈련을 위해 건설하기로 한 훈련장 비용이 포함됐음.

- 오키나와가 미국에 요구하는 오키나와 본섬 남부의 5개 기지와 시설의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새로운 협의기구에서 통합 계획을 작성하기로 했음.

● 美, 日에 TPPA 협상前 車·쇠고기·보험 양보 요구(4/21)

- 미국이 일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 민주당의 '경제공조 프로젝트 팀'이 지난 9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의회가 일본의 TPPA 참여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의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의 업계는 의회를 상대로 일본으로부터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임. 미국에서는 정부가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의회에 통고하고 90일이 지나야 교섭에 나설 수 있음.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애초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공식 방문에 맞춰 TPPA 협상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보하고, 정상회담에서 TPPA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음. TPPA 참여를 위한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민주당 내에서 TPPA에 대한 반대가 거세기 때문임. 노다 총리는 국정 최대 현안인 소비세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야권의 비협조와 민주당 내 반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TPPA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겠다는 것임.
- 일본 정부는 그러나 TPPA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시기를 5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6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으로 검토하고 있음. 후지무라(藤村修) 오사무 관방장관은 "정부로서는 TPPA 협상 참여를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면서 "TPPA 참여국과의 막바지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중·일 관계

● 日법원, 일본군 독가스 피해 배상청구 기각(4/16)

- 일본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에 버린 독가스 무기 때문에 부상한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음.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둔화



(敦化)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군이 버린 독가스 무기로 인해 부상한 소년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를 기각했음. 피해자인 중국 소년 2명은 일본 정부에 1인당 3천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음.

-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중국 정부와 협의해 회수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버린 독가스 무기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배상 청구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4건이었으며,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되거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

● 日 도쿄 지사 "센카쿠 사들이겠다"(종합)(4/17)

-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도쿄도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이시하라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방문지인 미국 워싱턴에서 행한 강연에서 "도쿄도가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제도의 매입을 위해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도쿄도는 센카쿠제도를 소유한 개인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연말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센카쿠제도는 오키나와현에 속하며 도쿄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섬임. 이시하라 지사는 매입 목적에 대해 "도쿄가 센카쿠를 지키겠다. 일본인이 일본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이다"고 강조했다. 센카쿠를 매입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오키나와현 및 이시가키(石垣)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센카쿠제도 근해는 어장이 좋고 해저 자원도 풍부하다면서 중국 어업감시선이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것과 관련 "이대로는 센카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 도쿄도가 센카쿠제도를 사들일 경우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이시하라 지사의 센카쿠 발언을 접한 중국은 이날 외교 루트를 통해 "관심을 갖고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음.
- 일본 정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임.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이어서 문제를 표면화할 필요가 없는데 이시하라 지사가 인기를 노리고 센카쿠제도를 사들이겠다고 나섬으로써 중국을 자극해 분쟁 심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임. 또 2010년 9월에 센카쿠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의 충돌 사건이후 악화된 외교관계가 거의 복원된 상황에서 이시하라 지사의 돌출 행동으로 다시 갈등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음.
- 센카쿠제도는 오키나와 본섬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410km 떨어져 있고, 모두 5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으며, 4개 섬은 사이타마(埼玉)에 거주하는 남성이 소유하고 있음. 이들 섬은 정부가 소유주로부터 임차해 관리하고 있음.



● **日 이시하라 "센카쿠 中 반발은 절반의 선전포고"(4/18)**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 위다오)를 매입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중국이 반발한 데 대해 "절반의 선전포고"라고 말해 파문을 키웠음.
-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이시하라 지사는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17일 오후(현지시각) "미국이 오키나와의 일부로 반환한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중국이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절반쯤 선전포고"라며 정부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센카쿠를 지키기 위해 개인 소유주로부터 매입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치받은 것임.
- 그는 "센카쿠의 섬을 사들여 어족자원을 개발해 일본의 어선이 수산물 생산에 많이 나서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외국의 배들이 조심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정부가 현재 국회의원의 시찰을 포함해 센카쿠 상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 "자기 영토에 상륙하는 걸 막는다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쿄도의 선택으로 상륙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음.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센카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도 모두 위법이며 무효"라면서 "센카쿠가 중국령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음. 다만 외교부 역시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센카쿠는 대만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 한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7일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센카쿠를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런 발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센카쿠 소유자의 진의를 다시 확인하면서 모든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 국유화도 고려 사항의 하나임을 시사했음.

사. 기. 타

● **"러 지난해 군사비 지출 세계3위" <SIPRI 보고>(4/17)**

- 러시아가 지난해 심각한 경제위기 여파에도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음.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1년 72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해 미국(7천110억 달러)과 중국(1천430억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 이 같은 러시아의 군사비 규모는 2010년에 비해 9.3%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별 순위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두 계단을 뛰어오른 것임. 러시아는 2010년엔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 5위에 머물렀음.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에선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을 앞질렀음. 중국이 GDP의 2%를 군사비로 지출한 반면 러시아는 3.9%를 썼음.



- 러시아는 2011~2020년 사이 소련 시절부터 내려오는 낡은 무기 가운데 70%를 현대식 무기로 교체하는 등의 군현대화에 23조 루블(약 7천 490억 달러)을 지출기로 하는 등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음.

● "美, 안보리에 北 17개 기관 자산 동결 요구"(4/18)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17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 17개 기관단체를 안보리 제재위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음. 이는 현재 자산이 동결된 8개 기관단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 미국은 안보리 제재위에 제시한 추가 제재 리스트에 17개 기관단체를 명기했으며,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곳인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과 유럽연합도 향후 독자적인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제재 대상에 오를 북한의 기관단체는 증가할 전망이다.
- 자산동결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조치임. 자산동결 대상에는 2006년에 3개 기관단체, 2009년에 5개 기관단체와 개인 5명이 각각 지정됐음.
- 유엔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중국,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요미우리〉(4/18)

-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명확치 않지만 탈북자의 송환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 신문은 랴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음.
- 다른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탈북자 송환 중단이 "우호국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없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음.
- 중국은 지금까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면서도 탈북자가 발견될 경우 북한에 강제송환해 한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송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
- 중국은 이달 들어 3년 가까이 자국 내 한국 공관이 보호하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용인했음. 지난 달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이에따라 탈북자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인도, '中 도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종합)(4/19)

-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아그니-5' 시험발사에 성공했음. 이 미사일은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의 비제이 사라스와트 소장은 19일(현지시간) 사정이 5천km에 이르고 길이 17.5m, 무게 50t 규모의 아그니-5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아그니는 인도어로 '불'을 뜻함. 사라스와트 소장은 영문뉴스 채널인 타임스 나우에 출연해 "오늘 오전 8시7분 인도 동쪽 해안의 섬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600km이상의 고도까지 올라갔으며 3단계 발사 과정이 적절히 작동해 탄두가 계획대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 그는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인도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6개국에 이름을 올려 미사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인도 총리실은 성명에서 "만모한 싱 총리가 직접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과학자들에게 축하를 건넸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시간대는 당초 18일 밤이었으나 기상조건 때문에 늦춰졌음.
- 아그니-5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3단계 미사일로 1.5t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기차나 차량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거나 위성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음. 인도 정부는 그동안 이 미사일 개발에 4억8천600만 달러를 투입했음. 인도 관리들은 아그니-5를 2014~2015년에 전력화하려면 4~5번의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도는 그동안 중국의 지역 패권에 맞서기 위한 군비 개발 경쟁을 지속해왔음. 인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정 3천500km의 아그니-3는 중국 주요 도시까지 도달하기 힘들지만, 중국은 인도 전역을 목표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추고 있음.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에 불과하며, 인도가 이 미사일을 전력화하면 6번째가 됨.
-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선을 둘러싸고 전쟁을 치렀으며 최근 수년간 인도양의 패권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겪어왔음.
- 앞서 인도는 지난 4일 남동부 비사카파트남 해군기지에서 러시아 핵 잠수함 '차크라 2호'를 취역시켜 핵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음.
- 뉴델리에 있는 한 서방 외교관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지만, 인도는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인도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북한의 로켓 발사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일축했음.
-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핵 능력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핵무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인도는 핵비확산 조치를 굳건히 지켜왔고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왔다"고 말했다.



● 패네타 美국방 "中, 北미사일 개발 지원"(4/20)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기술 교환"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물음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관련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거부했다.
- 그는 "그러나 분명히 지원은 있었다"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핵 무기능력은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과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은 북한이 외교적 교섭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발에 직면해 우리는 갑자기 멈췄다"고 덧붙였다.

● 中 지도층, 中의 세계 최강국 가능성 낮게 전망(4/20)

- 중국의 일반 국민들과 달리 지도층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을 갈수록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미국인 단체인 100인 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대규모 여론 조사에서 20년 후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될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일반인들은 56%가 그렇다고 대답해 2007년 조사에서 보다 그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 반면 중국의 지도층은 2007년 조사에서 53%가 그럴 것으로 전망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37%로 뚜렷이 낮아졌다. 특히 중국의 여론지도층에서는 그 비율이 5년 사이에 31%에서 23%로 감소했다. 중국 여론 지도층의 75%는 중국 정부가 대미관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해 2007년 37%보다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이런 변화에 대해 여론조사사업을 주도한 관계자들은 정확히 원인을 지적할 수는 없으나 (중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개방성이 확대된 것이 한 원인 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진행된 이번 여론 조사에서 양국 국민은 모두 상호 잦은 갈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인 일반 중국인의 비율은 59%에 달했으며 지도층에서는 무려 90%나 됐다. 또 중국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진 일반 미국인의 비율도 55%에 달했다.
- 그러나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였다. 미국인들이 중국에 긍정적 견해를 갖고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지도층 비율은 20%에 그쳤다.
-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걸쳐 중국에서 4천153명, 미국에서 1천400명을 각각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에서의 조사는 해리스 인터랙티브, 중국에서의 조사는 호라이즌 리서치 컨설팅사 그룹이 각각 맡았다.



● <美의원 "일본해 표기 재고돼야"..'풀뿌리의 힘'>(4/22)

- 국제사회의 동해 표기를 바로잡으려는 미국 교포사회의 풀뿌리 시민은 동에 미 연방 하원의 중진의원이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한인유권자센터(KAVC)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빌 파스크렐(뉴저지) 의원은 최근 미국 지명위원회(USBGN)에 서한을 보내 "아시아 본토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의 명칭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많은 유권자들이 '일본해(Sea of Japan)' 표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나도 그러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동해라는 표현은 수백년간 일본해와 병기되거나 별개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미국지리학회(NGS)와 구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도 이미지나 출판물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파스크렐 의원은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 지명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음. USBGN은 미 정부의 공문서와 지도에 사용되는 국내외 지명을 통일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 정부 산하 기관임.
- 미 국무부는 USBGN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계기로 교포사회에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운동이 본격화됐음.
- 8선인 파스크렐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임. 예산을 쥐고 있어 정부기관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강한 편임. 그가 동해 표기 바로잡기에 나서 달라는 KAVC의 요청에 응한 것은 지역구에 있는 한국인 유권자 8천명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는 선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파스크렐 의원은 KAVC에 별도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시절에 강요당한 이름인 '일본해' 표기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행하게도 미 지명위원회는 계속 일본해 표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비롯해 한인 교포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KAVC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바꾸려면 행정부보다 의회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파스크렐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풀뿌리 운동의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스크렐 의원은 한인 밀집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의원"이라며 "선거를 앞둔 의원에게 몰표보다 더한 무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 KAVC는 재미 한인의 정치력 제고 활동을 벌이는 뉴욕의 풀뿌리 유권자 운동 단체임. 김 의원은 지난해 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자, 동해 병기, 위안부 문제 등을 미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이슈화했음. 이달 초에는 이민자나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미국 사회의 발



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엘리스 아일랜드상'의 수상자로 결정되기도 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